

이순신 - 진린 장군 완도서 대대적 선양 韓·中 관계 회복 '훈풍'

문대통령·시주석 역사적 친근감 피력
완도군 "두 장군 자취 모아 기념사업"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국빈 방문한 지난 15일 베이징대학 강연에서 "한국 완도군은 임진왜란 때 왜군을 격파한 조선의 이순신 장군과 명나라 진린 장군을 함께 기리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에는 지금 진린 장군의 후손들 2000여명이 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중국과 한국은 근대사의 고난을 함께 겪고 극복한 동지이므로 동지적 신의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2014년 7월 우리나라를 방문, 서울대 강연을 통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노랑해전에서 싸운 명나라 장수 진린 장군의 후손들이 한국에 살고 있다"고 역사적 친근감을 언급한 바 있다.

사드문제로 냉각된 양국 관계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420여년 전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두 장수의 용기와 우정이 언급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완도군은 정유재란 당시 노랑해전에서 물러나는 왜군을 끝까지 쫓아 물리친 이순신 장군과 명나라 진린(陳麟) 장군의 자취를 한 자리에 모으는 사업을 추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급면 충무리 묘당도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충무공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통해서다.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2020년 완료를 목표로 고급면 묘당도 일대에서 충무공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85억 원을 들여 조성할 공원에는 두 장군의 동상, 관왕묘, 정유재란 테마전시관, 전시영

상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완도군은 2021년부터 정유재란 테마파크와 문화마을을 대대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관왕묘 건립(재건)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고급면 묘당도 유적지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수군 본영을 둔 곳으로, 진린 장군이 관우의 신주를 종묘에 모시려고 관왕(관우)묘를 조성한 곳이기도 하다. 관왕묘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명나라 군사들에 의해 각지에 건립됐으며 현재는 서울 동관왕묘가 가장 유명하다. 진린 장군은 고급도를 떠나면서 관왕묘를 잘 지켜달라는 부탁을 남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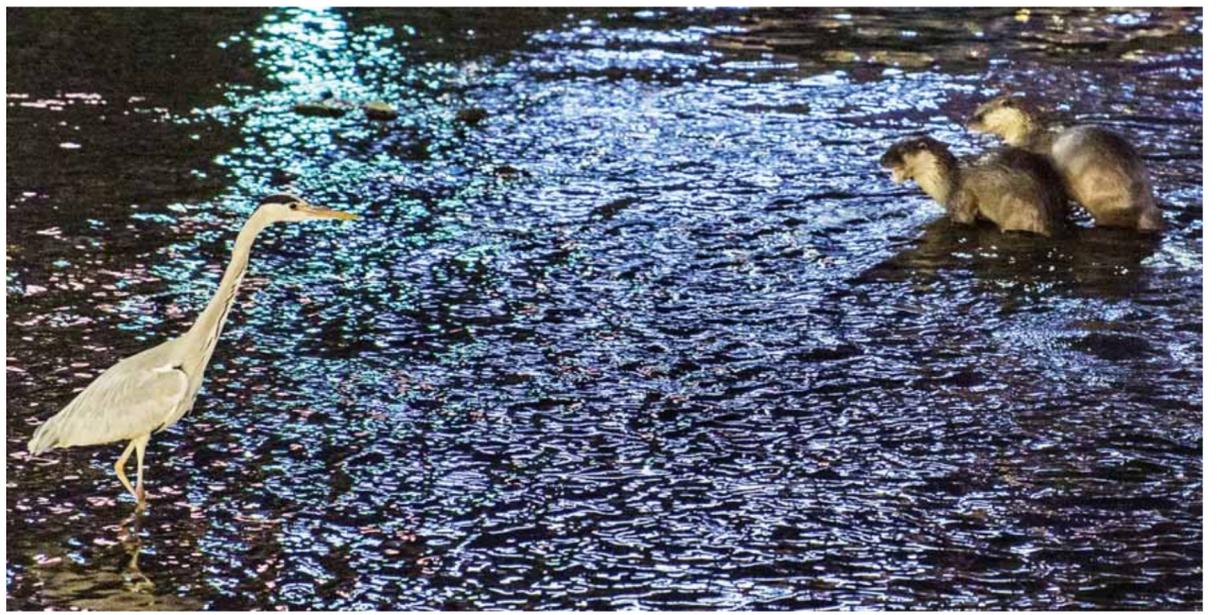
고급도 관왕묘는 일제강점기 때 훼손됐다. 현재 이순신 장군을 모시는 충무사로 바뀌었다. 최근에는 전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관왕묘비만 남아있다. 완도군은 내년 하반기에는 관왕묘 건립 공사와 전시영상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방침이다.

완도군은 그동안 중국에서 열린 '진린 장군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는가 하면, 중국 광둥성에 거주하는 진린장군 후손들과 국내 진린 장군 후손의 고급면 이충무공 유적지 관람을 추진하는 등 진린장군에 재조명에 공을 쏟아왔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문화재 전문가와 역사학자들의 학술 연구용역을 통해 역사적 사실관계에 의한 묘당도 관왕묘 재건과 진린 장군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며 "사업을 통해 한중관계 개선과 중국인 관광객 유치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ejchung@kwangju.co.kr

살고 있었구나... 광주천 수달과 왜가리의 먹이다툼



19일 오후 7시께 광주시 동구 아시아문화전당 인근 광주천변에서 수달(천연기념물 제330호) 두 마리와 왜가리가 대치중이다. 물고기를 쫓으며 다가서는 왜가리를 향해 수달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채 쫓고 있다. 최근 광주천에 잉어와 붕어 개체가 늘면서 수달과 왜가리가 먹이 다툼을 하는 흔치 않은 장면이 도심 한복판에서 연출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연구개발특구 확대 어려울 듯 한전 중심 강소특구 신규 지정 추진

과기부 특구정책 정비 따라

과기부와 전남도가 에너지밸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광주연구개발특구의 확대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실상 어렵게 됐다. 전남도는 핵심기업인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신규 강소특구 지정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 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강소특구 모델로의 변경 ▲강소특구 지정면적 총량관리제 도입 ▲불필요한 면적 해제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연구개발 역량의 우수성을 검증받은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집적화된 소규모 공간 범위를 특구로 지정하는 '강소특구 모델' 방식으로만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된다. 과거 방식의 대규모 특구 신규 지정은 앞으로 불가하다는 것이다. 연구개발특구 난립 방지를 위해 강소특구에 대해 20㏊ 규모의 지정면적 총량관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미 지정된 기존 특구들 중에서도 불필요한 면적은 지정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 18.73㎢(광주 80% 장성 20%) 면적의 광주연구개발특구를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혁신산단, 동신대와 광주시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포함해 약 5㎢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과기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기존 확대 방안에서 한전을 중심으로 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등으로 범위를 축소해 별도의 강소특구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한전이라는 확실한 기업이 있는 만큼 강소특구의 신규 지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라며 "시행령 등 구체적인 제도의 변화를 파악한 후 과기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한전공대 설립 국제컨설팅 용역 연내 발주

1단계 타당성 검토... 2단계 내년 9월 개 이뤄질 듯

한전공과대학 설립을 위한 국제컨설팅 용역이 이달 중으로 발주된다. 19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한전공과대학 설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종합계획) 수립' 국제컨설팅 용역을 이달 내 발주한다. 오는 2018년 4월께 1단계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용역 1단계에서는 공대 설립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과업 지침 중에서 지역의 최대 관심사인 '대학설립 후보지' 부분이 포함된 캠퍼스 기본계획 용역 보고는 기존에 알려진 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간 상태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자체 간 용역결과에 따른 부담을 덜게

또 2단계 보고는 내년 9월쯤에 이뤄질 예정이며, 대학설립과 캠퍼스 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알려졌다. 과업 지침 중에서 지역의 최대 관심사인 '대학설립 후보지' 부분이 포함된 캠퍼스 기본계획 용역 보고는 기존에 알려진 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간 상태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자체 간 용역결과에 따른 부담을 덜게

됐다 분석이다. 여기에 아직 지자체로부터 한전공대 설립 부지를 추천받지 않았으나, 계속 미뤄질 경우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지도 추천받을 수 있다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다. 한편, 한전공대는 한전이 총 5000억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제63회 호남예술제 전국대회 음악부 지정곡 ▶17면

전남 신생아 증후자실·인력 부족 ▶6면
트렌드 2017-‘어른이’가 사는 법 ▶18면
광주FC 새 감독 ‘피들이’ 박진섭 ▶20면

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노인, 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지원대상**
-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급여별 선정기준 (4인가구 기준)**
- 생계 134만원, 의료 178만원, 주거 192만원, 교육 223만원
- 부양의무자 기준**
-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수급자가구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 포함
 - 부양의무자가구: 기초연금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 포함
 - * 20세 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증) 중증장애인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상담문의 및 상세내용**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포털 복지로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 교육부 홈페이지
 - 음면동 주민센터

